

주제: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강사 : 이동기(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leedk@gwnu.ac.kr)

I. '한국적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

1. 한반도 통일 논의와 독일

동아시아 '냉전'(또는 지역갈등)의 복잡성과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을 전제한 관점(즉 '한국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을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독일 내 좌파 정치가 내지 비판적 지식인들의 '흡수통일'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수용해 이를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여년 동안 통일독일이 '통일위기'와 후유증을 어렵게 극복하며 이루어 낸 제한적 '성과'에 기초해 위안을 받으며 독일통일 방식과 과정을 이상화하거나 모범으로 삼는 방식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통일대박'을 내세우며 독일통일의 경험을 잘 연구해 '통일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정확한 의도나 목적은 알 길이 없으나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북한(조선)의 '체제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박근혜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도 독일통일을 모범으로 삼아 북한 사회의 체제전환을 인도적 문제와 물질적 지원과 연계시켜 제시한 것이다. 조선(북한)의 격렬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반도 통일을 꿈꾸며 독일통일을 모범으로 내세울 때는 1989년 전까지의 동서독 관계를 중심으로 보느냐와 그 후의 과정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1989년 가을까지의 독일 경험을 놓고 보면 동서독간 화해와 협력이 중요하고, 1989년 겨울과 1990년 그리고 1994년까지의 독일통일 과정은 '흡수통일'의 방식과 속도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 붕괴와 그 후속 발전의 과정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경험을 자동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면, 그리고 독일이 경험한 흡수통일의 슬한 오류와 위기와 부정적 발전 양상을 무시하고 현재의 다소 안정적인 결과적 상황에만 주목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용하다.

2. 분단극복 조건의 구조적 차이

독일의 통일 과정을 '체제 붕괴에 기초한 급속한 흡수통일'에 대한 사후적인 정당화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분단의 점진적 극복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식 전제이다.

아울러 '한국적 관점에서'는 먼저 1989/90년 유럽과 동아시아, 독일과 한반도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주목하여 독일통일의 구조적 요인과 주체행위의 역할을 비교사적 내지 주체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1) 먼저, 냉전 시기 유럽 분열과 독일 분단의 직접적 연계의 의미와 1989/90년 그것의 동시적 극복 과정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주목이다. 한반도 분단이 동아시아의 지역 분열에

대해 갖는 의미와는 달리 독일분단은 곧 유럽 냉전 내지 유럽 분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였다. 물론 독일의 다양한 민족중립주의자들은 독일분단의 해결이 곧 유럽냉전 극복과 유럽통합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독일문제는 민족적 정체성의 강화나 민족주의적 동원에 기초한 ‘독일적 해결’보다는 ‘유럽적 해결’ 또는 유럽통합의 전망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는 독일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역사적 부채(‘갈색그림자’)로 말미암아 더욱 더 설득력을 얻어 갔다. 1970년대 8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이 독일통일을 전면 유보하고 오히려 동서 양진영의 화해와 협력의 진전 -KSZE와 EC의 역할까지 포함하여-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결국 1989/90년 독일통일이 무엇보다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붕괴를 통한 유럽냉전 해체의 직접적 결과였음은 독일통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이자 특수한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에(평화를 앞당기는데 집중함으로써 결국 통일의 결정적 요소를 확보했다는 의미) 일뿐 아니라 한반도 분단극복의 복합성을 사고하는데도 중요하다. 직접적 연관관계에 놓여있던 유럽냉전과 독일분단의 경우와는 달리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분단극복은 그 자체로 각기 자기 동력과 구조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내지 충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한반도 분단 극복에서 동아시아적 평화 문제 해결과 민족적 분단 문제 해결의 이중성과 상호작용이 더욱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통일과 연관된 독일분단 구조의 또 다른 특수성은 유럽 내 동서 진영 간 힘의 균형과 동서독간 힘의 불균형의 이중적 차원에 놓여 있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 진영 간의 의면상 힘의 균형 체제 하 동서독간의 실질적 불균형이 동서독간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영토와 인구 및 경제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복리의 면에서도 동서독 간 불균형은 시종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고 동독은 분단 시기 내내 상대적 불안정 속에 소련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유럽적 차원의 국제적인 균형과 독일 내 일국적 불균형의 동시성은 냉전과 분단 시기 내내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결국 이 불균형과 균형의 동시성이 해소된다면 독일 분단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1980년대 중후반 동독은 소련과의 경제협력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독일문제에 대해 “역사가 결정할 것이다”라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소련이 동독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자 동독의 자생력은 사라졌고 급속히 국가 위기에 빠져들었고 체제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와 분단체제가 각기 고유하게 갖고 있는 비대칭성과 불균형성이 더 비교 분석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조선의 역사적 지위와 현실적 함의는 유럽에서의 동독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브루스 커밍스나 찰스 암스트롱 및 국내의 조선(북한) 연구자들이 조선(북한)의 질긴 생명력 내지 고유한 자생력을 강조할 때 항상 초드는 것은 197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남한) 비교 우위에 대한 조선(북한)인들의 자의식과 기억이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역사 현실적 갈등의 증충성(전통적 대국과 소국 간의 새로운 긴장, 20세기 전반 제국주의 국가와 탈식민 국가들 간의 문제들,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냉/열전 대결, 민주주의/비민주주의 정치문화) 또한 남북한 간의 현재적 불균형과 비대칭성을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만들거나 상대화하고 있다.

### 3. 분단극복의 행위 주체

1) 주체행위(agency)와 관련해서 독일통일의 동력을 논한다면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1980년대 화해협력정책의 성과가 지닌 의미에 대한 주목이다. 1980년대 동서독 관계는 단순히 1970년대의 성과가 양적으로만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동서독 수상이 주고받았던 “책임공동체”나 “이성의 연합”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협상과 협력의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동서독 간 이견과 갈등 요소도 서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렇기에 이미 1980년대 후반 실제로 양독의 일부 핵심 정치가들은 ‘국가연합’을 매개로 동서독 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다. 비록 동서독 모두 강령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통일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1989년 가을 동독이 무너지자마자 순조롭게 통일이 이루어진 데에는 1980년대 후반까지 이루어낸 양독 간의 관계증진과 그 과정에서의 학습과 경험이 결정적이었다. 심지어 1980년대 후반 이미 동서독은 이미 국가연합의 바로 전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연합을 “국제법적으로 규정된 특정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나 “운동”으로 본다면 이미 독일은 1980년대 국가연합적 협력과 관계의 단계로 접어들었던 셈이다. 요컨대 1980년대 동서독 간 관계의 질적 발전과 1989/90년 독일 통일이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국가지도자들의 서랍에 강령과 계획서가 없었다고 해서 통일의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동서독은 이미 1980년대 후반 관계의 증진으로 민족재결합의 문턱에 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지난 시기 남북 간 화해협력정치가 우파 정부로 넘어오면서 연속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현실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다.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도 사실은 ‘악마와의 춤’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국가연합적 방식의 통일이 사실은 어떤 이상적이거나 망상적인 국제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가 이미 달성한 것을 법, 제도적으로 확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도 그렇다.

2) 주체행위와 관련한 두 번째 논점은 1989/90년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한 것이다. 1989/90년 독일통일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동독 시민들의 민주혁명과 통일열망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989년 가을과 겨울 동독의 반체제 민주화운동과 1990년 10월 독일 통일은 자동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989년 유럽냉전의 해체, 또는 동서독 간 분단 상황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동독 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안정적인 독일통일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애초 동독체제 붕괴와 독일통일 사이에는 몇 개의 강이 놓여 있었고 동독 사람들은 각기 서로 다른 강가에다 진을 쳤다. 초기의 민주혁명이 “민족 혁명” 내지 “민족으로의 전환”으로 귀결된 데에는 무엇보다 동독주민들 다수의 사회경제적 복리에 기초한 서구 지향적 통일욕구가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1989년 당시 동유럽의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유럽이었다”는 미국 역사가 토니 주트(Tony Judt)의 언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한 “유럽”은 초민족적 공동체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리와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등과 연대 지향적인 독특한 유럽적 ‘삶의 방식’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그 지향과 희망들은 통일 후 냉혹한 현실에 부닥쳐 새로운 굴절과 고유한 자기정체성으로 결집되었다. ‘역사의 종언’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신화는 애초부터 이들의 욕구와 지향을 포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동독 사회주의 체제 붕괴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제3의 길”이 관심을 잃고 동독 다수 주민들이 서독(‘유럽’)으로 향했는지에 대해 이데올로기에 물든 단선적 평가가 아니라 좀 더 차분한 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숙고는 그와 같은 ‘유럽’이 도대체 한반도 내지 동아시아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먼저 ‘유럽’(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 가치 및 생활양식으로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선(북한) 주민의 흡인력을 높일 수 있으며 동아시아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한반도 통일의 열쇠는 평양이나 베이징, 또는 워싱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

3)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체제 전환과 통일을 이끈 서독 정치 지도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콜 총리는 당시 누구보다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통일정치의 구상과 실천에 있어 단호함과 신중함을 잘 병행했다. 물론 그는 철저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충실했고 권력 지향적으로 행동했다. 특히 1990년 1월 중순 이후 콜은 “경제적 이성”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따라 행동했는데 급속한 흡수통일로의 파국적 길을 인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콜 총리의 권력 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안 세력들이 당시 그 어떤 점에서도 콜 총리와 겨룰 수 있는 구상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비극이면서 동시에 콜 방식의 독일 통일이 불러일으킨 여러 문제점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거듭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역사는 무승부를 내버려두지 않는다!”(스테판 하임)

## II. 독일 통일의 역사

### 1. “관계부재” 시기(1949-1969) 양독 관계

서독의 초기 아데나워 정부(1949-1963)와 기민련 주도의 후속정부들은(1963-1966 루트비히 에어하르트 수상 집권기, 1966-1969 기민련/사민당의 대연정) 서방으로의 통합 정책과 “협의 우위 정책”에 입각해서 단독대표 원칙과 동독 국가 불인정 입장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아데나워 수상은 독일연방공화국을 서방과의 정치군사적 및 사회문화적으로 통합된 독일의 중핵국가로 간주했고, 전 독일에서의 자유선거라는 해결책 외에 동독과의 정치협상을 통한 통일 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렇듯 동독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면 동독이 곧 자체 붕괴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1961 베를린 장벽 건설을 통해 드러나듯이 그와 같은 일방주의적 외교 및 동독정책으로는 단지 적대적 대결과 민족 분단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방통합과 동독체제불인정을 통한 급속한 흡수 통일 전략의 정치적 비현실성이 확인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후 서독 정부가 결국 1960년대 후반 동독과의 직접 대화로 나서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내적 전환 과정이 필요했다.

한편 민주적인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동독의 사통당 지도부는 건국 초기부터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과 내부 정치적 불만의 중화와 통제를 목적으로 끊임없이 민족통일의 정치적 수사를 동원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서독 정부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생각은 전혀 없었다. 동독 지도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 외에는 단지 소련의 대서방 압박정책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었다. 양독간 공식 접촉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를 들면 1951 양독간 교역을 위한 ‘베를린 협정’ 체결) 정부 간 대화나 협상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이 “관계부재”의 국면이 196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관계부재’라는 말이 곧 상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양독간을 규정했던 것은 냉전적 대결과 적대였다. 즉 서독 건국 초기부터 1960년 전반기까지 서독 정부는 연방전독일문제부(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이하 연방전독부)를 중심으로 동독 주민들을 겨냥해 동독 정권에 대해 저항하도록 자극하며 공세적인 냉전적 대결을 수행했다. 당시 미국이 옹호하고 전파했던 ‘롤백(rollback)-정책’과 ‘해방(liberation) 정책’은 1950년대 서독 정부의 동독 정책과 사실상 일치했고 곧 대 동독 주민 활동의 근간이 되었다. 심지어 해당 핵심 정부 부처인 연방전독부는 이 ‘해방’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 CIA와 OPC와 협력했고 그들의 지원을 받았다. 애초 이 미국 첩보 기관들은 군사적 작전 내지 물리적 대결을 통한 동독 체제 전복 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그 현실적 어려움과 모험적 성격 때문 점차 구상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서독 정부는 냉전의 전초지로서 분단 독일이 갖는 특수성으로 동독 내지 세계 공산주의의 대 서독 침투와 그들의 서독 내 반체제 활동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산주의 동독에서의 체제 저항세력의 강화 및 동독 주민들의 반체제 의식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선전 활동에 몰두했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 언론 매체를 통한 선전활동: 라디오와 신문
- 정치 선전 책자와 전단지 배포와 발송
- 동독 반체제 그룹 지원 및 소요 조장 활동
- ‘사랑의 선물’ 공세

물론 양독 정부 간 공식적인 “관계부재” 및 서독 정부의 공격적인 대동독 심리전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과 사회단체간의 접촉 내지 정부기관들의 비공식적 접촉과 대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서독의 자민당(FDP)과 동독의 독일자유민주당(LDPD)은 1956년부터 1967년까지 접촉과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를 시도했다. 발터 쉘(Walter Scheel)과 볼프강 뢰링(Wolfgang Döring)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대화협상주의자들은 동독의 대화상대자들이 잠재적으로나마 사통당과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것임을 믿었고 접촉과 대화를 통해 이를 강화하여 동독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일자유민주당(LDPD)은 철저히 사통당의 노선에 충실했고 동독 지도부가 의도한 서독 내 정치 변혁을 위한 대서독활동(Westarbeit)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사민당 또한 초기의 단호한 격리 정책을 버리고 헤르베르트 베너(Herbert Wehner)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는 1954/55년 경 부터 본격적으로 동독과의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1959년의 사민당 통일강령인 “독일계획(Deutschlandplan)”안은 - 비록 여전히 통일은 곧 동독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측면에서 동독의 당시 통일정책에 근접한 것이었다. 또 1960년 6월 말 사민당 지도부는 결국 기민련의 서방통합정책을 받아들이는 노선 변경을 천명했고 그 결과 동독지도부와 정치적 대결에 휘말렸지만 동독과의 정치 협상의 필요성은 여전히 열어두었다. 그러나 1966년 사민당과 사통당의 “연설자교환” 협상을 통한 상호간 직접 접촉 시도는 동독 지도부의 주저와 통일전선정책에 입각한 정치공세로 말미암아 다시금 좌절되고 말았다.

한편, 의회와 중앙 정치 바깥에서 양독 정부의 분단 강화 과정에 대항해서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독자성을 확보하며 분단극복의 길을 제시한 적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 1949년 분단국가 형성 전후에서 1950년대 후반 내지 심지어 1960년대 까지 다양한 정치적 조류의 “중립주의자”들 내지 민족화해주의자들이 냉전의 압박을 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실 비스마르크 이후 20세기 전반기까지 독일의 외교사를 염두에 두고 보면 동독의 소비에트체제로의 편입 이상으로 초대 연방수상 아데나워의 서방편입 정책은 독일외교사에서 혁명적 전환이었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저항은 양독 모두에서 다양한 정치적, 사상적 조류와 결합하면서 전개될 수 있었다. 그들은 유럽 냉전 체제 블록의 형성을 저지하고자 독일 내지 유럽 중립화안을 고안했고 통일을 위해 두 분단국가 사이의 민족 협상과 타협을 주장했으며, 더러는 포괄적인 차원의 ‘제3의 길’을 궁극적인 장기적 전망으로 제시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의 동서 블록체제의 형성과 심화에 대한 비판과 거부가 사회경제 부문이나 내정에서도 제 3의 대안적 길에 대한 관심과도 결합되었던 것이다.

## 2. 1970년대 동방정책의 성과와 한계

1969년부터 1982년까지의 시기는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 수상 주도하의 서독 사민당/자민당 연정 그리고 동독의 새로운 권력자인 에리히 호네커 정권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시기로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양독 정부 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본격화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의구심이 항상 따라다녔지만 1969년부터 최소한 1975년 또는 1979년까지 양독 정부 간 대화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적 긴장완화와 유럽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울러 1960년대 전반기부터 본격화된 서독 내 여론사회의 뚜렷한 입장변화도 사민당의 ‘점근을 통한 변화’(에곤 바르)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이미 당시 기민련 정부의 ‘힘의 우위 정책’을 통한 흡수통일 전략에 대한 실망으로 비판적 언론과 지식인들은 동독과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전후 유럽 냉전질서와 독일 분단 상황의 현상 유지 -동독과 동유럽 체제와 국경 인정 및 통일 전망과 논의의 유보-에 기반을 둔 “실용주의적 동방정책”은 서독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주권국가로의 국제법적 인정을 최종 목표로 했던 -다시 말해 더 이상 그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던- 호네커의 “현실주의적 서방정책”과 조율하면서 ‘기본조약’ 체결 및 이산가족상봉과 상호방문, 교통과 통신협정, 경제협력과 공동사업, 재정 지원과 문화교류 등등에서 타협과 양보에 기초해 질적 관계변화를 만들어냈다.

특히 1972년 12월 동서독 간 ‘기본조약’ 체결은 향후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와 협력관계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동서독간 ‘기본조약’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동서독 중 어느 한 국가도 다른 국가를 대표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국가로서 상호 승인했고 유엔 동시 가입과 상주대표부 설치를 그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 조약 외에 통행규제 완화,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우편물 교환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각서도 교환, 본격적인 협력의 장을 열었다. 그렇지만 ‘기본조약’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분단조약이 아니었다. 동방정책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인 바이에른 주 기사련(CSU) 주정부의 헌법소원에 대해 1973년 7월 31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밝힌 대로, ‘기본조약’은 “이중적 성격”을 지녔다. 그것은 한편으로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 간의 국제법적 협약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일 내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기에 독일민족의 지속과 독일 전체에 대한 4대강국의 책임을 여전히 강조함으로써 법적으로 독일통일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한편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또 다른 주요한 성과는 ‘기본조약’이 국내에서 법적  
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확고한 지지기반을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1972년 4월 말 기민련/기사련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동방 정책을 공격하며 의회에서  
브란트 총리 불신임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뒤 11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기민련/  
기사련의 보수우파 정치 세력들은 44.9%를 얻어 그 정치적 만용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빌리 브란트의 인기는 치솟았고, 사민당과 자민당은 각각 45.9%와 8.4%의 선거 지지  
를 획득해 안정적 과반수를 구축했다. 보수 우파 기민련/기사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하고 의회의 비준, 헌법재판소의 승인 판결 및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는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전체 시기, 즉 1982년 정권교체까지의 세 차례 정상회담(1970년 3월 동독의 에어  
푸르트, 같은 해 5월 서독의 카셀 그리고 1981년 12월 동독의 베르벨린제)은 상징적 의미  
외에 직접적 성과나 중요한 변화를 낳지 못했다. 또 양독 정상들이 “작은 걸음”에 매달리  
며 “큰 걸음”(분단극복)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합의는커녕-도 개시하지 못한 것은  
이 시기 사민당 동방정책의 딜레마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979년부터 새롭게 전개된 국제적 냉전의 갈등 격화에 양독 정부 간 관계개선이  
다시 구속 제한받게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해 낼 동력을 양독 정부 간 대화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1970년대 사민당의 화해협력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유럽평화체제’(에곤 바르 등)토론인지 아니면  
“국가연합” 내지 그 준비단계로의 이행 -이를테면 헤르베르트 베너가 제안한 “독일 경제공  
동체”-을 통해 양독 관계를 더욱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는지는 쉽게 답하기 어렵  
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건 간에 1972년에 체결된 양독간 ‘기본조약’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었  
다. 이에 기반을 둔 양독 정부 간 공식적 내지 비공식적 대화의 (준)제도적 정착 그리고 대  
화 참여자 내지 협상자들의 타협과 조정 학습효과, 교류경험 축적과 공유 및 상호간의 정치  
적 개인적 신뢰 형성도 1970/80년대 양독 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통일로의 도정에 중요한 밑  
바탕이 되었다. 이 또한 지난 10년간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함께 다  
루며 비교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시기 양독간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이 하나 있다. 보수 야당인  
기민련과 동독 사통당의 중간협상자들 사이의 접촉과 상호이해의 전진이다. 연이은 정  
치적 패배와 정세변화에 직면해 기민련 지도부는 1975년부터 이미 체결된 동방 조약들  
과 양독간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75년 헬싱키회담 이후  
헬무트 콜을 비롯한 기민련 내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은 알프레트 드레거(Alfred  
Dragger)와 기사련 당대표인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 등의 “보수주의  
적 강경파들”과 노선 투쟁을 벌이며, 조심스럽게 이전까지의 격렬했던 동방 정책 반대 입장  
을 포기하고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에 조응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동방정책을 강력히 반대했  
던 야당 기민련의 지도적 정치가들까지 동방정책을 기본적으로 수용, 지지하며 심지어 그들  
중 일부가 동독과의 비공식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후 1980년대 양독간 대화 지  
속과 관계발전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3. 1980년대 양독간 선린관계의 질적 발전: “이성의 연합”

1982년 10월부터 1989년 10월 말 동독의 체제 붕괴직전 까지 양독 관계와 정부 간 대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보다 **보수집권당이자 1970년대 전반기 동방정책의 완강한 반대자였던 기민련(CDU)/기사련(CSU) 정치가들이 집권 초부터 시종 흔들림 없이 “실용주의”적 동방정책을 전면적으로 계승, 연속,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권력교체를 전후해 사민당 소속의 동방정치가들과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던 비판적 시민사회와 여론의 우려와 예상을 뒤집는 일이었다. 동독정부도 또한 “반갑고 놀라운” 일로 받아들였다.

1982년 10월 1일 기민련의 당수 헬무트 콜(Helmut Kohl)은 자민당의 지지와 참여로 새로운 보수/자유주의적 연정을 구성하며 권력을 위임받았다. 새 정부의 정책 기초를 총괄적으로 드러낸 10월 13일의 제 1차 ‘정부선언’에서 콜은 자신의 정부를 “중도내각”이라고 규정했다. 새 내각은 많은 정책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표명했고 이전 사민당 주도의 정부정책의 단절과 전환을 실행했다. 사민당과 기민당의 정책불화와 연정 붕괴의 핵심적인 원인이자 당시 여론과 일반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경제와 재정문제였는데, 콜/겐셔 내각은 경제성장 지속과 실업 감소를 기치로 기왕의 사민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복지삭감과 기업친화정책을 공공연히 선전했다. 그와 같은 정책전환을 “새로운 역사적 출발”이라고 선언했다.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콜은 동독/통일정책에서는 집권 초부터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독 대통령 칼 카르스텐스(Karl Carstens)과 외무장관 겐셔(Hans Dietrich Genscher)는 1982년 11월 14일 모스크바에서 동독 사통당 총서기이자 국가평의회 의장인 호네커를 만났을 때 새 연방정부가 이전 사민당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콜 수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982년 11월 29일 이번에는 콜은 직접 호네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동서독사이의 기본조약 및 그 외 모든 다른 협정과 합의들은 양국 간 관계 발전의 기본”임을 확인했고 연방정부는 동독과의 선린관계 진전에 큰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1983년 1월 24일 처음으로 호네커와 전화통화를 할 때 이와 같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그 해 3월 초 총선 후에도 변함없이 지켜질 것임을 밝히며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였고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의 여지를 없앴다.

아울러 실제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이미 합의했거나 진행 중이었던 각종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1982년 11월 중순 이미 양독의 건설부장관 회담 그리고 교통부장관 회담 등의 공식대화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각각 서독의 한 건축전시회의 동베를린 전시권, 그리고 이미 건설 중인 베를린과 함부르크간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속할 수 있었다. 또 12월 초에는 수상공관 장관, 필립 예닝어(Phillipp Jenninger)는 동베를린을 공식 방문해 동독 외무장관 오스카 피셔(Oskar Fischer)와 양독간 문화협정을 체결하기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1970년대 사민당 주도의 동방정책이 “빈틈없이” 1980년대 우파 정부에 의해 계승**되었던 것이다.

물론 양독간 협력 관계나 대화 협상이 모든 문제에서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1983년 2월 4일 호네커는 콜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중부유럽의 비핵화추진을 제안했지만 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독 시민 루돌프 부르크케르트(Rudolf Burkert)가 1983년 4월 10일 동독으로의 여행을 위해 입국하던 중 동독 국경경비대의 조사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양독 정부 간의 상호비방이 재발했고 양독 정부 간 대화가 일시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견 불일치와 긴장 또한 이미 대화와 관계 지속의 정상화



과정의 자연스런 일부로 자리 잡았음이 중요하다. 상호간에 다양한 제안이 오가고 가능한 차원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갈등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확보한 것은 양독간 대화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독 정상은 제 2차 국제적 냉전과 나토 재무장 논쟁의 와중에서도 양독간 “이성의 연합(Koalition der Vernunft)” 내지 “책임공동체(Verantwortungsgemeinschaft)”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속적 대화와 협력을 거듭 천명했고 실천해갔다. 1980년대 중후반 여야를 막론하고 서독의 주요정치가들은 이 양독간 대화에 참여하였고 지역 간 및 사회 전 분야로 교류는 확대되었다.

<표> 1949-1988년 사이에 동독(동베를린 포함)에서 서독(서베를린 포함)으로 넘어간 난민과 이주민 수

연도	난민	합법이주민	합법 이주민 중 거래를 통 해 석방된 정 치범	합계
1949(9월 이 후)	129245			
1950	197788			
1951	165648			
1952	182393			
1953	331396			
1954	184198			
1955	252870			
1956	279189			
1957	261622			
1958	204092			
1959	143917			
1960	199188			
1961	207026			
1962	16741	4615		21356
1963	12967	29665	8	42632
1964	11864	30012	880	41876
1965	11886	17666	1160	29552
1966	8456	15675	400	24131
1967	6385	13188	550	19573
1968	4902	11134	700	16036
1969	5273	11702	850	16975
1970	5047	12472	900	17519
1971	5843	11565	1400	17408
1972	5537	11627	730	17164
1973	6522	8667	630	15189

1974	5324	7928	1100	13252
1975	6011	10274	1150	16285
1976	5110	10058	1490	15668
1977	4037	8041	1470	12078
1978	3846	8271	1480	12117
1979	3512	9003	900	12515
1980	3988	8775	1010	12763
1981	4340	11093	1584	15433
1982	4095	9113	1491	13208
1983	3614	7729	1106	11343
1984	3651	34982	2236	38633
1985	3484	18752	2676	22236
1986	4660	19982	1536	24642
1987	6252	11459	1247	17711
1988	9718	29033	1083	38751

한편, 콜 정부는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동독 공산주의의 억압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고 화해협력정책의 궁극 목표가 “자유”에 기반을 둔 민족 통일임을 이전 정권보다 더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때때로 동독과의 비판적 거리유지와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지속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로는 당내 반대파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국내정치를 위한 내수용의 정치적 수사”였을 뿐이었다. 실제 정치 실천 영역에서는 사민당/자민당 내각보다 콜/겐서 내각이 동독에 더 많은 양보와 지원을 제공했고 콜 수상과 수상 비서실은 수시로 동독지도부와 전화 통화와 서신 교환을 통해 그리고 상주대표부를 활용해 당면 문제들을 협의 조정해 나갔다. 또 콜 수상은 자신의 당내 최대 경쟁자이자 실용주의적 동방정책에 대한 잠재적 반대자였던 바이에른 주 장관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에게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과 독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1983년과 1984년 콜의 양해와 지지 하에 슈트라우스의 직접 주선으로 서독은 동독에게 정치적 반대급부에 대한 어떤 분명한 보장도 없이 각각 10억 마르크 상당의 차관을 두 차례나 제공했다. 콜은 이를 통해 당내 우파세력의 반발을 무력화하고 통합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동독 체제의 안정은 양독 관계 발전의 근간이기에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을 넘어서 동독체제 붕괴를 겨냥한 당 내외 일부의 적극적 통일추구 요구와 움직임에는 오히려 제동을 걸기도 했다. 콜 총리에게 있어 통일은 아직 먼 훗날의 과제일 뿐이었고 당장 중요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협력관계의 진전이 독일정책의 전부였다.

1987년 호네커의 본(Bonn) 방문과 정상회담은 동독에 대한 서독정부의 실질적 승인이었고 동독 서방정책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동독 지도부는 이 외교적 성과를 국내정치적 개혁과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정치적 몰락으로 치닫게 된다.

#### 4. 1989/90년 독일 통일 과정: 급속한 흡수 통일

흔히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동독 공산주의 체제 붕괴의 독일 통일로의 발전 과정은 당연하지도 않았고 필연적이지도 않았다.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월 말까지의 주요 국면

을 면밀히 살펴보면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곧장 평화적 체제 전환과 민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 국면마다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했고 혼재의 상황이 지배했다. 물론 이미 1989년 늦여름과 가을 동서독 사이의 힘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불균형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갱신 내지 재생 불가능성도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과 과정 및 속도로 동독에서 안정적 체제 전환과 민족 재결합의 전망이 마련될 지는 불명확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독 정부는 심지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정세를 신중히 관망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왜냐하면 그 때까지 대다수 동독의 반체제 운동가들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개혁되고 개선된 새로운 사회주의 동독”의 건설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들은 독일통일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동독의 대다수 반체제 운동가들은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면 서독의 자본주의적 경제적 힘에 눌려 ‘개혁 사회주의 동독’이 숨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서독 정부는 외면적으로는 원칙적, 규범적 입장만 되풀이한 채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동독 지도부와 내적 대화 과정에서는 이미 1989년 10월 말부터 자유선거와 자유로운 정당 건설의 보장 같은 정치 체제 전환을 동독에 대한 경제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동독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치 체제의 전면적 개혁과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직접 연계시킴으로 서독의 콜 정부는 이 시기부터 동독을 사실상 “공동통치”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당시 콜 총리와 그의 참모들은 동독 지도부에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방식으로 체제 전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제 전환의 구체적 과정과 시기 및 속도 등을 직접 “지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신중함과 단호함의 공존 문제이다. 분단체제의 급격한 불안정 속에서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사회에서 폭력 내지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체제전환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기에 콜 총리는 이미 사실상 정치적 정당성과 영향력을 잃은 동독 공산주의 지도부를 여전히 대화와 협상 상대로 인정하며 체제 개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동독 지도부가 서독의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급히 이행해야 할 개혁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통제와 내정에의 개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서독정부는 동독의 반체제 운동이 통일에 반대하며 동독 사회주의의 갱신을 요구하는 민주혁명에 멈추어 서 있는 상황에서 통일 문제를 먼저 제기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곧 동독 민주혁명의 또 다른 질적 변화가 전개됨으로써 콜 정부는 이 양면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1989년 11월 중순 동독에서 드디어 혁명의 제 2국면이 전개되었다. 이제 상당수 동독 주민들은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일종의 ‘전환’ 속의 ‘전환’이자 ‘혁명’ 속의 ‘혁명’이었다. 물론 지식인이나 운동가 중심의 상당수 반체제운동 그룹들은 여전히 “제3의 길” 같은 동독의 독자적 발전 노선을 내세우며 서독과의 통일을 반대하고 견제했다. 국가적/민족적 전망을 둘러싸고 자칫 동독 내부의 균열과 불화가 드러나고 있었다. 아울러 동독의 민족 열망에 조용하며 서독 내 극우세력들의 민족주의적 동원 조짐도 일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주민들의 통일열망을 냉소하며 “유럽통합”이라는 무지개를 내세우는 서독 좌파들의 탈민족적(post-national) 전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콜은 이 불투명한 혼재의 국면에서 ‘10개조 통일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통일 논의를 흡수, 압도할 수 있었다. 동독 주민들에게 체제 개혁의 청사진만이 아니라 통일 전망을 분명하

게 제시함으로써 서독으로의 대량탈출을 억제할 수 있었고 동독 내부의 혼란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 아울러 독일민족의 운명의 결정은 전적으로 독일인들에게 있음을 세계에 알린 선언이었다.

1989년 11월 28일 콜이 연방의회에서 발표한 **‘10개조 통일 강령’은 그 핵심이 연방국가로의 완전 통일이전에 국가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한 것이었다. 당시 콜은 15년 정도의 양독간 국가연합 단계가 필요하리라 보았다. 그는 당시만 하더라도 양독이 1-2년 내 급속하게 통일이 되면 엄청난 재정적,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연합 단계에서는 아직 동독이라는 국가가 여전히 존재해야 하겠지만 이미 그것은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구성된 민주정부가 통치하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 국가연합 단계는 가능하고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다. 또 대부분의 국가연합안과는 달리 콜의 ‘10개조 강령’은 동서독의 국가연합적 발전과 안보 및 외교 문제를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군사동맹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통일 논의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동서독 사이의 국가연합적 협력과 동독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제3의 길’ 같은 정치적 대안에 쉼기를 박았다. 게다가 이 ‘10개조 통일강령’의 또 다른 강점은 그것이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을 분명하게 일차적 과제로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럽 통합의 전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몇몇 문제로 외교적인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콜은 이 10개조 통일 강령으로 급변하는 정세를 조정하고 스스로 맨 앞에 서서 향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점차, 즉 **1989년 12월 후반 동독 주민들은 다시 콜보다 더 앞서 내닫기** 시작했다. 콜 수상에게 1989년 12월 19일 드레스덴 방문 시 동독 대중들이 외친 “헬무트, 헬무트!”, “독일, 통일 조국” 라는 구호들 그리고 12월 22일 브란덴부르크 문의 개방 공식 축하 행사 시 몰려든 동독 대중들이 드러낸 강력한 통일열망은 “결정적 경험”이었다. **동독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국가연합 방식의 우회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급속한 통일임이 확인**되었다. 콜 총리와 총리실도 이 새로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한편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10 개조 통일강령 중 핵심인 국가연합안이 사실상 폐기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당장은 동독 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동독 지도부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면서 상황을 조율하였다. 그 대신 애초 동독 지도부와 약속한 “계약공동체” 내지 국가연합의 협상은 자유선거로 새롭게 구성될 정부와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급속한 통일로 방향을 틀었나갔다. 콜은 애초의 신중한 우려와는 달리 곧 “경제적 이성”을 버리고 “정치적 이익” 내지 모험을 택했다.

한편, **1990년 1월 중순 콜이 급속한 흡수 통일의 전망을 제시했을 때 이미 국가연합안은 통일안이라기보다는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에 반대하는 서독의 탈민족주의자들이나 흡수통일로 동독 사회가 나뉠 발전시킨 가치와 업적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일부 동독 정치가들이야 여전히 국가연합안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미 통일 열차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국가연합이라는 간이역은 둘러보지도 못한 채 점차 시야 속에서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동독 주민들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콜은 급속한 통일로 발생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경고의 목소리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독 주민들의 통일 욕구에 의존했다. 선거는 3월 18일로 앞당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과 소요는 없었다. 동독에서는 서독 정당을 모델로 새롭게 민주 정당들이 조직되었고 동독 최초이자 최후의 자유선거에서 주민들은 급속한 통일과 콜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표명했다. 동독인들은 동독의 기민련과 같은 우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서독만큼 물질적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의 1:1 화폐통합이 이루어졌고 동독의 14 개도(Bezirk)를 5개주(Land)로 재편했으며 신탁청을 통한 대규모 사유화로 대다수 동독의 공장과 기업들이 서독자본에 귀속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씩 내정 상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폐통합과 ‘흡수통일’은 동독 경제를 부흥시키거나 생활수준을 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동독 지역은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대했고 사회적 긴장과 부담이 가중되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선언 이후 오히려 동서독 지역의 차이와 균열은 본격적인 문제가 되어갔고 동독 지역 주민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박탈감과 실질적 격차를 경험하며 급속한 흡수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 III.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

#### 1. 최근 독일에서의 통일평가

독일 통일 20주년을 경과하면서 최근 한국의 보수적 지식인, 학자 및 정치가들은 독일통일의 경험을 이상화하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한 급속한 흡수통일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며 ‘통일세’(이명박)나 ‘통일대박’(박근혜)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정작 독일에서는 신중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학자들이나 지식인 사이에서 독일통일은 여전히 그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비판적인 논의가 드세다. 이 때 통일에 대한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동독 경제의 능력, 대규모 재정적 지원의 맥락 하에서 본 동서독간 “생활상태의 균등”, 제도적 질서와 선거행위 또는 가치지향에서 나타난 동독 지역 신주의 정치적, 정치문화적 발전 정도 등이다. 그 외에도 동독의 과거, 즉 연방공화국이 구동독, 그 지배체제 및 일상생활을 어떻게 대면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독일의 역사의 일부로 다루어야 하는지가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이해 이루어진 최근 토론은 동독의 변화과정 및 통일 과정이 결코 종결된 것도 아니고 특정 목표점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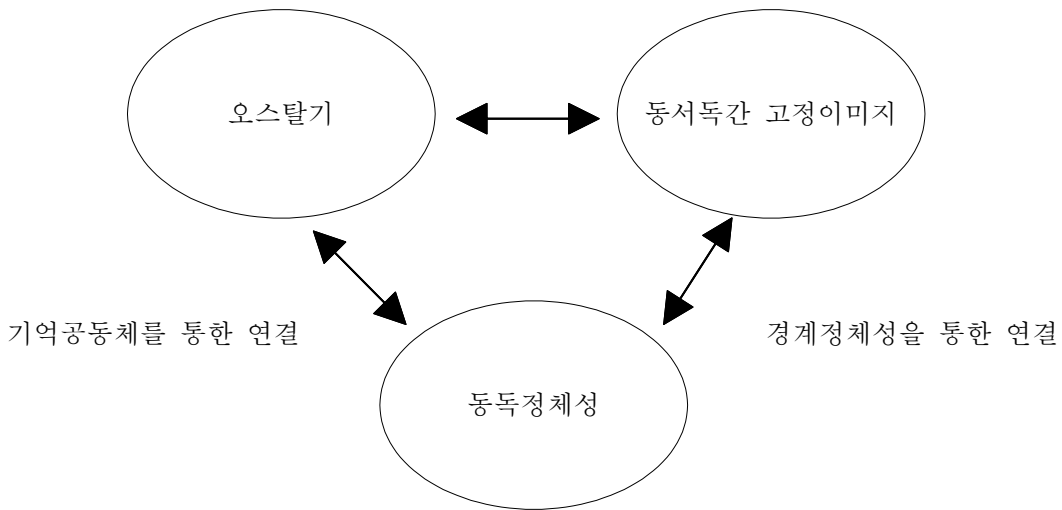
1) 첫째, 현재 독일의 정치 경제 엘리트, 전문가들 및 대다수 주민들은 “경제적”, “내적”, “사회적” 통일의 “완성”은 1990년의 대다수 행위자들과나 관찰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1995년이나 2000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2008년 연방수상 메르켈도 “많은 영역에서 동서독간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마도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 둘째, 이전보다 최근에 더 집중적으로 문제로 삼는 것은 그 “통일의 완성”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이고 되어야하는지 이다. 두가지 논점이 있다. 첫 번째는 동서독간 생활상태의 ‘균일화’ 내지 ‘평등’이란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기본법 72조 2항에서 언급된 “대등한 생활상태의 달성(Herstellung gleichwertiger Lebensverhältnisse)”에서 그 “대등함(Gleichwertigkeit)”이 곧장 지역들사이의 균등분배, 조정(Angleichung)이나 평준화(Ausgleich)를 의미할 수 없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등함이란 내용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동서독간 차이보다는 동독과 서독의 내부 차이가 더 주목받고 있다. 이를테면 인구밀도, 경제력, 취업률, 수입, 공공설비 등에서 예나나 드레스덴과 바우첸이나 슈텐달이나 뎀민같은 지역의 차이가 중요해졌고 아울

러 서독지역의 경우도 잘란트나 브레머하펜의 ‘빈촌’들에 대해서도 나란히 언급되었다. 무차별적으로 ‘동독 재건’이라고 뭉뚱그려 말하기 어려워졌다.

3) 세 번째, 동독 지역의 지체된 경제 회복 속도, 사회구조적, 사회문화적 독특성으로 인해 동독의 변혁과 독일통일 문제를 보는 관점의 근본적 전환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중적 변환”**: 1989/90년 ‘전환’을 서독을 모델로 한 재건으로 보고 통일을 동독이 서독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는 모든 구상과 정치전략의 포기 및 동독의 변화를 20세기 포드주의적 산업사회의 일국적, 유럽적, 전지구적 단절 과정의 열린 실험장으로 이해하는 것.

4) 넷째, **동독정체성의 형성과 지속에 대한 새로운 관심 제고. 오스탈기 현상 내지 ‘제3세대 동독인’의 등장에 대해 주목할 필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2005년 11월부터 독일사에서 초대 여성수상이자 최초의 구동독 출신 수상으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k) 또한 ‘자유의 투사’라는 상징적 지위를 넘어 2012년 3월 연방대통령에 취임했다.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이미 동독은 서독과의 내적 통합을 이미 상당 부분 달성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지만 동독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본질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고유의 집단적 정체성은 여전히 강고하다. 심지어 **구동독을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동독정체성과 오스탈기가** 확인된다.



동독인들이 독일국민정체성이 아니라 동독 지역정체성으로 결집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대별 차이나 정당지지자별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오스탈기는 동독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오스탈기는, 서독출신들이 지배하는 주류 담론에서는 오랫동안 동독인들이 다시 ‘구동독’을 원한다든지 통일을 물리려고 한다든지 통합에 저항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었다. 그러나 오스탈기는 “과거”, 또는 “우리 민족, 문화, 지역”, 즉 여기서는 “동독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배 담론 및 흔한 이야기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낀 동독인들이 스스로 그와 같은 평가들이나 결합들을 주체적으로 수정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스탈기는 일종의 통합전략으로 기능한다. 오스탈기는 다만 동독주민들의 일부는 통합 시에 서독인들의 다수와는 완전히 다른 고유한 경험과 기억과 가치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통합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토론이 필요해졌다.

## 2)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시사점

최근 독일에서는 통일을 기념하는 가운데도 급속한 일방적 흡수통일의 후유증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1990년 1월 말 이후 짧은 몇 년 동안 콜 정부가 동독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서독 체제를 그 곳에 이식하는 과정은 지나치게 패권적이고 일방적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것은 술한 동독 주민의 인간적 희생과 고통 및 실망과 열패감을 낳았다. 물론 독일통일과정의 가장 격렬한 반대자였던 하버마스가 말한 것처럼, 당시 다소간 불가피해 보였던 급속한 흡수통일의 역사적 진행을 '반(反)사실적인 가정'에 근거해 무조건 흠낼 수는 없다. 단지 흡수통일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과 과정에 따라 여러 갈래 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1990년 1월 중순 이후 콜 총리를 비롯한 서독 정치지도부가 수행한 방식의 통일과정은 어쨌든 당시 많은 전문가들과 비판적 지식인들의 우려대로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 체제 이식이었다. 콜 주도의 독일 통일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동독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자유와 시장경제의 정착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전제하더라도 한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동독 주민들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와 지향을 더 발현케 하고 통일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흡수통일이나, 국가연합이나는 식의 대립적 사고로 정치적 상상력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 상호간 체제를 존중하는 이행기의 국가연합의 길을 지향하더라도 긴급한 상황 전개로 인해 흡수 통일적 길을 수용해야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이 급변해 국가연합이 아니라 흡수통일이 현실로 닥치더라도 다양성의 존중과 차이의 공존,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동의 합의 노력이라는 원래의 연방주의적 정치 원리와 덕목은 여전히 소중하다. 왜냐하면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그와 같은 **연방주의적 정치원리를 제대로 발휘할 때에만이 오히려 민주적 체제전환에 기초한 흡수통일도 더 성공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주의 사상과 제도야말로 이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오랜 근원이자 지속적인 발현 형식** 아니었던가?

또 통일과 통일과정과 문제점들을 과잉 이데올로기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이를테면 독일통일은 당시 전지구적 세계화의 물결과 동시적이었다. 물론 세계화는 1990년 이전에도 존재했던 전 지구적 현상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최근의 전 세계적 경제적 연루 및 지역 및 국가 초월적 정치적 상호영향의 속도와 규모는 유례가 없던 새로운 현상이다. 1990년대 통일독일의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이 세계화 과정의 부정적 효과들과 맞물려 진행된 측면이 있다. 세계화 발전의 맥락 속에서 통일독일의 발전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동독 지역 주민들은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통일 후 서독 주민들 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급속한 흡수 방식의 민족 통일 후의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들이 중첩적으로 만났을 때 생기는 여러 양상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동독 지역 주민들은 익숙한 오랜 일자리들의 소멸, 급속한 기술적 변화, 구조적 실업,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주민 증대,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가치들의 충돌 및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들어온 값싼 생필품들과의 거친 경쟁 등에 노출되었다. 북한의 체제붕괴 후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을 전제하면 북한 사회 내지 다수 주민들은 '이동시민'으로서의 자괴감에 덧붙여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의 결과 내지 그것에 대

한 소극적 적응의 산물로서 결국 '세계화의 패자'로 현상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도 또한 남북통일 시에 북한 사회와 주민들은 남한과의 긴밀한 관계 뿐 아니라 세계화의 다양한 충격 속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독일통일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 협약을 통한 상호간 절제와 양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더 많은 민주적 토론에 기초한 공동의 합의 과정 등의 중요성을 거듭 환기시킨 사건이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그와 같이 상식적인 정치적 덕목과 소박한 민주적 가치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포와 위협, 압박과 힘자랑, 오해와 비방의 소음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바로 냉전이고 분단이다. 그렇기에 냉전과 분단을 진정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덕목들이 남북 모두에서 확장되는 과정을 말한다. '평화' 통일이 단순히 전쟁 없음의 상태를 넘어 더 많은 소통을 통한 화해를 의미하는 것처럼, '민주' 통일이란 의미도 단순히 공산당의 자리에 시장과 의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및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한 공동의 합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